

G20

윤 덕 룡 국제거시금융실 국제거시팀 선임연구원 (dryoon@kiep.go.kr, Tel: 3460-1068)

오 승 환 국제거시금융실 국제거시팀 전문연구원 (ohsh@kiep.go.kr, Tel: 3460-1228)

1. 서울 G20 정상회의 개요
2. 주요 의제 및 타결 내용
3. 주요 성과 및 의의
4. 향후 G20 정상회의 과제



▶ 11월 11~12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5차 G20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음.

- G20 국가와 더불어 초청기관 및 국제기구 대표 등 32개 국가와 기관이 참여하여 20개항에 달하는 선언문, 74개 항의 합의문, 3개의 부속서를 발표함.

▶ 서울 정상회의의 주요 성과는 환율전쟁의 확산방지, IMF 지분개혁,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도입, 금융시장의 안정성 확대, 빈곤국에 대한 경제개발 실행계획수립 등임.

- 환율문제와 글로벌 불균형문제는 최초로 공식의제화되어 본격적인 해법을 모색할 수 있는 전기(轉機)를 맞게 됨.

- IMF의 지분 6%를 신흥국으로 이전하는 국제금융기구의 개혁이 결정되었으며, 향후 거버넌스와 내부 인적쇄신까지 개혁이 확대될 것.

- 글로벌 금융안전망 도입과 핫머니 규제가능성 확보는 신흥국의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임.

- 빈곤국 경제개발을 위한 실행계획의 합의는 빈곤국들의 가난극복에 기여할 뿐 아니라 향후 글로벌 경제의 새로운

잠재시장을 육성하게 될 것임.

▶ 이번회의는 특히 신흥국으로의 경제권력 이동이 가시화되는 특징을 보임.

- 의제에 신흥국 관심사가 제시되었고, 논의과정에서 신흥국의 의견이 균형있게 반영되었으며, IMF 개혁 등 실질적인 성과는 오히려 신흥국이 더 많이 차지함.

▶ 서울 G20 정상회의는 지금까지의 위기대책 회의와 달리 국제경제 관리자의 역할이 부각된 회의였음.

- 한국은 G20의 성공적 개최로 자국의 위상제고와 국제네트워크 구축, 규칙 제정, 국제적 영향력 확대 등의 혜택을 누림.

▶ G20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상설사무국 설치와 의제선정, 논의과정, 아웃리치 등에 관한 제도화가 필요함.

- 한국은 향후 영향력 확대를 위해 아시아 관련자회의의 (Caucus) 혹은 한·중·일 관련자회의의 도입과 상설 G20 연구센터의 도입이 필요함.

1. G20

■ 11월 11~12일 제5차 G20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되었음.

- G20 정상회의를 G7 국가가 아닌 신흥국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됨.
- 서울 정상회의에는 G20 국가 이외에 스페인, 에티오피아, 말라위, 베트남, 싱가포르와 국제기구인 IMF, 국제노동기구(ILO), UN, 세계은행, OECD, WTO, 금융안정위원회(FSB) 등 32개 국가와 기관이 참석하였음.

표 1. G20 국가

분류	국가
G7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이탈리아
아시아·중동	한국,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중남미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유럽·오세아니아	EU 의장국, 러시아, 터키, 호주
아프리카	남아프리카공화국

■ 또한 한국은 신흥국으로는 처음으로 G20 의장국이 되어 주요 의제를 준비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형식과 내용 모두에서 선진국과 신흥국의 기대와 관심을 받았음.

- G20 정상회의 의장국은 회의를 개최하고 진행할 뿐 아니라, 회의에서 논의할 이슈 결정 및 논의과정의 선택에 주도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회의에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
- G20 정상회의에 의장국으로서 다양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최국으로 지정된 것은 한국이 국제사회의 신임을 획득한 것을 시사함.

■ 서울 정상회의에서 그동안 G20에서 논의되었던 주요 의제들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이번 회의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G20의 위상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판단됨.

- 글로벌 경제위기가 최고조에 다다랐던 지난 1~3차 회의에서는 위기 극복을 위한 글로벌 경제협력 공조방안이 주로 논의되었음.
- 4차 회의는 그동안의 논의되고 합의한 사안을 평가하고 재

확인하며, 향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졌음.

* 캐나다에서 개최된 4차 회의는 G8 정상회의와 G20 정상회의가 함께 개최된 것으로, 실질적으로 주요 이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기보다는 문제 제기의 성격을 보였음.

- 서울에서 개최된 5차 회의는 G20 정상회의 역할을 “위기극복”에서 “경제시스템 관리”로 전환시킨 첫 번째 회의임.

표 2. 1~7차 G20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

장소 및 일시	주요 의제
미국 (워싱턴) 2008.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개 항 및 47개 실천과제(Action Plan)로 구성된 정상선언문 채택 - 국제금융위기 원인과 그간의 조치에 대한 평가 - 금융위기 해소를 위한 정책공조 방안 - 국제금융체제 개편방향 - 자유무역, 시장경제 기본원칙 재확인
영국 (런던) 2009.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9개 항의 정상선언문 및 2개 부속서 채택 - 확장적 재정·통화 정책 등 거시경제정책 공조 방안 - 보호주의 저지 - 금융규제 및 국제협력 강화 - 국제금융기구 개혁
미국 (피츠버그) 2009.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1개 항의 서문, 8개 주제와 50개 항의 본문, 2개 부속서의 정상선언문 채택 - G20 회의 정례화 개최 합의 - 출구전략 공조 확인 - 국제금융기구 쿼터 개혁 추진 - 지속가능한 성장체계 구축을 위한 협력 - 금융규제 개혁 및 감독 방안 마련 협의
캐나다 (토론토) 2010.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개 항의 서문, 5개 주제에 43개 항의 본문, 3개 부속서의 정상선언문 채택 -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협력체계 공조 합의 - 금융부분 개혁 및 규제 강화 - 국제금융기구 쿼터 이전 및 개혁 추진 - 보호주의 저지 및 무역·투자 증진 협력 - 저개발국 지원 방안 마련 협의 * 재정적자를 2013년까지 50% 감축하기로 합의
한국 (서울) 2010.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항의 정상선언문, 74개 항의 합의문, 3개의 부속서에 대해 합의 -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협력 - 국제금융기구(IMF 쿼터 이전 등) 개혁 추진 - 금융부분 개혁 및 감독 강화 방안 협의 - 글로벌 금융안전망 - 저개발국 지원(서울 개발 컨센서스) - 보호무역 저지를 위해 협력 강화
프랑스 (미정) 2011	<p>(예상의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 G20 정상회의 논의사항 점검 - 글로벌 기후통화 - 상품시장 부문 파생금융상품 규제 - 환율문제 - G20 사무국 설치
멕시코 (미정) 2012	(미정)

■ 정상회의에 11월 10~11일에는 앞서 서울 G20 비즈니스 서밋 (Business Summit)이 개최되었음.

- 비즈니스 서밋에는 12명의 정상들과 34개국 120여명의 글로벌 기업 CEO들이 참석하여 G20 의제와 관련된 경제 현안에 대해서 논의하였음.
- 회의 참석 기업인들은 지난 7월 이후부터 지속가능한 균형 성장에 관련된 12개의 주제에 대해서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음.
- 금융, 무역투자, 녹색성장,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 4개 분야 12개의 소주제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근거로 정상회의에 정책제안서를 제출함.

2.

■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는 이전 회의에서 논의 되었던 의제들과 환율문제, 그리고 의장국인 우리나라에 의해 제안된 새로운 의제가 균형있게 논의 되었음.

- 기존회의에서 이어받은 주요 의제는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협력체계”, “금융규제 개혁”, “국제금융기구 개혁”이며 그 외 기타사항에 “무역 및 투자 증진”, “기후변화 및 최빈국 지원” 등을 비롯한 거시경제 정책공조 등임.
- 한국에서 새롭게 제안한 의제는 코리아 이니셔티브로 알려진 “금융안전망” 및 “개발”이며, 지속적 아웃리치로 개최한 “비즈니스 서밋”의 건의수용.
- 추가된 의제인 “환율문제”는 서울회의 직전 국제경제 상황에 의해 제시된 돌발의제였음.

■ 서울 정상회의 결과로서 각국 정상은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협력체계, 금융부문 개혁, 글로벌 금융안전망, 저개발국 지원, 보호주의 저지 및 무역·투자 증진, 향후 의제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선언문에 합의하였음.

- 각국 정상들은 20항의 정상선언문, 74개 항의 합의문, 3개의 부속서에 대해 합의하였으며, 추가로 각 국가별 정책공조차원의 행동계획(Action Plan)을 발표하였음.

표 3. 서울 G20 정상회의 주요 의제 및 합의 내용

의제	주요 합의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 협력체계	- (환율)시장결정적인 환율제도로 전환 및 경쟁적 평가절하 자제 - (환율)신흥국의 자본 변동성 위험을 고려한 거시건전성 규제 인정 - (재정) 재정건전화 계획 수립 이행 - (리밸런싱) 예시적 가이드라인 논의
국제금융기구 개혁	- (IMF 쿼터개혁) 신흥국으로 6% 이전 합의 및 쿼터 100% 증액 - (IMF 지배구조개혁) 신흥국으로 이사직 2명 이전
글로벌 금융안전망	- IMF의 선제적 신용라인 개설 제도 강화(탄력대출제도(FCL), 예방대출제도(PCL)) - 시스템 충격 대응을 위한 제도적 장치 모색 - 지역안전망과 IMF의 협력 확대
금융규제 개혁	- Basel III 방안 채택 - 체계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에 대한 규제 및 감독 강화 - 신흥국 관점의 규제개혁에 대한 논의 - 금융소비자 보호방안 논의
무역	-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국제적 대응방안 공조 합의 - 최빈개도국에 대한 무역 역량 제고 노력 합의
개발	- “서울 개발 컨센서스” 합의 - 개도국 개발의제 추진 필요성 인식 - 성장과 연계된 실질적인 “다년간 개발 행동계획” 채택
기타 의제	- (금융소외계층)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GPFI) 신설 - (에너지) 가격 변동성 완화를 위한 협력 강화 - (기후변화)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 참여의지 확인 - (반부패) 반부패 행동계획 합의

가. 가

■ 피츠버그 정상회의를 통해 제시되었던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협력체계(Framework for Strong, Sustainable and Balanced Growth)는 서울 회의를 통해 중기정책 공조 방안인 “서울 액션플랜”으로 구체화되었음.

- 토론토 회의에서 국가그룹별 정책대안이 제시되었다면, 서울 회의를 통해 G20 회원국별로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마련되었음.
- 각국별 행동계획은 재정, 통화·환율, 금융, 구조개혁, 무역·개발 등 5개의 정책분야에 걸쳐 구성됨.
- 향후 이행보고서(Accountability Report)를 통해 각국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게 될 것임.

■ 특히 각국 정상들은 환율문제, 보호주의 배격, 글로벌 리밸런

싱 등 세계경제 성장의 위협요인을 해소하고 지속적인 동반성장을 위한 정책공조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 합의하였음.

- 국가별 의견차이가 컸던 환율문제의 경우 경쟁적 평가절하를 자제하고, 각국의 경제 펀더멘털을 잘 반영하도록 시장 결정적 환율제도를 이행해 환율의 유연성을 제고하기로 하였음.
- 다만 일부 신흥국이 직면하고 있는 과도한 자본변동성 위험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상황하에서는 거시건전성 유지를 위한 자본이동 규제를 인정하기로 하였음.
- 안정적인 국제통화체제를 위해 향후 IMF에 관련 연구를 요청함.
- 무역부문에서는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조치 도입을 반대하였으며, 도하개발어젠다(DDA)의 조속한 협상 완료와 금융보호주의를 배격하기로 합의하였음.
- 또한 세계경제에서 개도국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개도국 및 저소득 국가들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장애가 되는 요소들을 해소하는 데 노력하기로 하였음.
- 글로벌 리밸런싱에 대해서는 각국이 처한 국가적·지역적 환경을 고려하여 여러 지수로 구성된 종합적 지표를 통한 예시적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예방 및 교정노력을 기울이도록 합의함.
- 예시적 가이드라인은 Framework 워킹그룹이 IMF 등 국제기구의 도움을 받아 개발하고, 2011년 상반기 중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들이 논의하기로 하였음.
- 향후 예시적 가이드라인에 기반한 첫 번째 상호평가는 내년 중 수행하기로 함.
- 정상들은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피츠버그와 토론토 회의의 합의사항을 점검하였으며, 서울 회의에서 IMF 쿼터 개혁을 마무리하고 지배구조 개혁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음.
- IMF 쿼터개혁의 경우 피츠버그 정상회의 합의 수준인 5%보다 높은 6%의 개도국 이전을 합의하였으며, 쿼터 규모

도 IMF 설립 이후 최대인 100% 증액하기로 하였음.

표 4. IMF 쿼터 개혁에 따른 상위 쿼터 10개국

순위	국가	쿼터 비중(%)
1	미국	17.41
2	일본	6.46
3	중국	6.39
4	독일	5.59
5	영국	4.23
6	프랑스	4.23
7	이탈리아	3.16
8	인도	2.75
9	러시아	2.71
10	브라질	2.32
16	한국	1.80

- 또한 IMF 내에서 신흥국의 대표성 제고를 위해 24명의 IMF이사 중 2명의 유럽지역 이사직을 신흥국으로 이전시키기로 합의하였음.
- IMF의 감시활동에 대해서는 IMF 내부의 체제적 위험과 취약성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였으며, 체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을 가진 국가에 대한 금융평가 프로그램(FSAP)을 연례협의의 일부로 정기적으로 시행하기로 하였음.
- 또한 다자개발은행, 국제개발협회(IDA)에 대한 자본증액 및 자원보충 지원약속을 이행하기로 하였음.
- 금융부문 규제개혁 의제는 지난 워싱턴 회의부터 이어져온 의제인 만큼, 이전 회의에서 합의한 개혁조치들을 점검하고 각 사항들에 대한 완전한 이행을 다시 확인하였음.
- 금융안정위원회(FSB)의 제안에 따라 장외파생상품 및 신용평가사에 대한 규제 및 감독을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건전한 보상기준이행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음.
- 글로벌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거시적 감독 문제는 바젤위원회(BCBS)와 금융안정위원회(FSB)의 정책권고안을 채택하며 향후 이행에 노력하기로 합의하였음.
- 지난 9월 BCBS는 은행자본·유동성 규제 강화방안(Basel

III)을 마련하였으며, FSB는 서울 총회에서 체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에 대한 정책권고 방안을 제시하였음.

- 은행자본·유동성 규제 강화방안(Basel III): 보통주에 대한 자본비율은 2%에서 7%로 확대하고, 완충자본·유동성기준·레버리지 비율 도입

- 체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 규제: 손실흡수능력 강화, 감독 강화, 정리체계 마련, 지급결제 시스템 등 핵심인프라 구축

■ 향후 추가적으로 논의해야 할 금융규제 개혁 부문을 제시하였으며 IMF, FSB, BIS 등 국제기구에는 다음 정상회의 이전까지 연구를 진행하여 보고하도록 하였음.

- 향후 논의 사항으로는 거시건전성 체계, 신흥국과 관련된 규제개혁, 유사은행(shadow banking) 규제, 파생상품시장 규제, 시장 신뢰성 및 효율성 개선, 금융소비자보호를 제시하였음.

■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국제사회에서 글로벌 금융안정망의 필요성이 부각되었으며, 우리나라가 G20 회의에서 지속적으로 제안한 의제이기도 함.

- 정상들은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가 각 국가들이 금융변동성에 대처하는 것을 지원하고, 급격한 자본이동에 따른 경제적 혼란 감소, 과도한 외환보유고 축적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데 동의함.

- 토론토 정상회의에서는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 필요성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하였으며, 이후 우리나라의 주도하에 구체적인 정책대안이 마련되었음.

■ 서울 회의에서는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를 위한 국제공조 강화문제, 지역별 금융안전망과 IMF의 협력증진 문제들에 대해서 논의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대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음.

- 지난 8월 말 IMF 탄력대출제도(FCL) 활용도 제고, 예방대출제도(PCL) 신설 등의 금융위기 예방차원의 제도들이 도입됨으로써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초기적 강화방안이 마련되었음.

- 탄력대출제도(FCL): 최우량국가에 대해 사후 정책이행 요건없이 예방적 유동성 지원

- 예방대출제도(PCL): FCL 기준에는 미달하나, 건전한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국가에 예방적 유동성 지원

■ 향후에는 현재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시스템적 충격에 대한 제도적 접근방법, 각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지역협정과 IMF 간의 협력증진 방안을 추가적으로 모색하기로 하였음.

■ 개발 이슈와 관련해 정상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새천년개발목표(MDG) 지연, 더욱 심화된 빈곤문제 그리고 향후 지속적이고 균형있는 성장을 위한 저개발국 지원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였음.

- MDG 달성을 위해 다시 한 번 노력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개별 국가 차원에서도 ODA 공약과 최빈국을 지원하기로 하였음.

■ 이에 따라 정상들은 빈곤 감소와 저개발국의 지속가능한 성장, 성장 장애요인 제거를 위한 서울 개발 컨센서스와 다년간 개발 행동계획을 발표하였음.

- 다년간 개발 행동계획은 인프라, 인적자원개발, 무역, 민간투자 강화, 식량안보, 사회보호 프로그램, 조세행정체제 개선 등 총 9개 분야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향후 G20 정상회의에서는 지속적으로 서울 개발 컨센서스에 기초한 개발의제를 다루기로 하였으며, 프랑스 정상회의에서 진전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개발실무그룹에 다년간 행동계획을 감독할 임무를 부여하였음.

■ 무역과 관련해서는 DDA 협상 진전현황을 점검하였으며, 향후 조속한 타결을 위한 추진방안,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국제적 대응 공조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음.

- 세계 경기회복 과정에서 자유무역과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토론토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무역 및 투자 분야의 보호주의 저지(Standstill)를 위한 공조를 2013년까지 3년 연장하기로 한 것을 재확인하였음.

- 또한 WTO, OECD, UNCTAD에 보호주의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반기별로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함.

- 조속한 DDA 협상 타결을 위해 정상들은 모든 분야에 걸쳐 협상을 가속화하기로 합의하였음.

■ 추가적으로 정상들은 무역이 저소득 국가의 빈곤 감축과 경제 성장에 효과적임을 확인하였으며, 저소득 국가의 무역 역량 강화 지원방안을 제시하였음.

- 2011년 이후 무역을 위한 원조를 최소한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3년 평균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하였으며, 특혜원산지규정, 최빈개도국 상품에 대한 무관세무쿼터, 무역금융 등의 지원 방안을 수행하기로 하였음.

■ 금융소외계층 포용과 관련해서는 빈곤층 삶의 질 향상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음.

- 국제금융공사, 자문그룹, 민간 단체등으로 구성된 포괄적인 협력체제인 '금융소외계층 포용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GPFI)'을 발족하기로 함.

-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는 G20 중소기업 자금 지원 경진 대회에 제안된 우수사례가 확산될 수 있도록 자금 지원 기금을 마련하였음.

○ 한국, 캐나다, 미국, 미주개발은행이 양허성 지원 및 프로젝트 협조투자 형식으로 5억 2,8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함.

■ 에너지 부문에 대해서는 화석연료 보조금 개선계획 이행 점검, 석유 가격변동성 완화를 위한 협력 방안, 해양 유류 유출 사고 예방 및 처리 공조 방안이 논의되었음.

- 피츠버그 회의에서 제시되었던 비효율적 화석연료 보조금 합리화 및 단계적 철폐, 에너지 가격 변동성 완화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를 지속하기로 합의 하였음.

■ 각국 정상들은 기후변화에 대해 중요한 문제임을 재확인하였으며, 유엔기후변화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임을 합의하였음.

- UN의 기후변화 재원에 대한 고위급 자문그룹을 통해 발표된 보고서를 각국 재무장관들에 제공할 것을 요청함.

■ 반부패 의제의 경우, 지난 토론토 정상회의 이후 설립된 실무그룹을 통해 마련된 G20 반부패 행동계획을 승인하였음.

■ 역대 G20 정상회의 중 처음으로 함께 개최된 비즈니스 서밋에서는 12개의 워킹그룹 보고서와 공동선언문이 발표되었음.

- 공동선언문은 금융, 무역투자, 녹색성장,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최종 68개의 권고사항이 작성되어 G20 정상회의에 제안되었음.

○ 12개 워킹그룹 보고서의 주제는 무역확대방안, 외국인직접투자, 중소기업육성, 금융규제와 실물경제 지원, 출구전략에 대한 시각, 인프라와 자원개발 펀딩, 에너지 효율 향상, 신재생 에너지 확대, 녹색 일자리 창출, 생산성 향상, 청년실업, 개도국 의료 확대임.

■ 정상들은 G20 정상회의의 선언문을 통해 비즈니스 서밋 개최를 환영하고 향후 정상회의에서 지속적인 개최 지지를 제시하였음.

3.

가. G20

■ 가장 많은 합의사항을 도출하여 위기극복 시기를 정리하고 세계경제 관리의 시기로 성공적으로 진입함.

-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5개의 주요 아젠다에 대하여 모든 부문에서 기대했던 합의가 이루어짐으로 글로벌 위기이후 지속되어온 아젠다들의 논의가 마무리됨.

- 그동안 공식적으로 논의조차 하지 못한 “환율” 문제와 “글로벌 불균형” 문제를 정식으로 논의하였으며, 원칙을 설정하고 향후 해결방향을 합의하여 위기 이후 경제관리를 성공적으로 시작함.

■ 주요 현안에 대하여 각국의 이해관계를 노출하면서도 합의의 틀을 유지함으로써 글로벌 거버넌스로서 G20의 위상이 안정된 기반에 놓이게 됨.

- G20의 효율성과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이번 회의에서 사전협의와 아웃리치를 이용하여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함으로써 안정적 기반을 확보함.
- G20에서 주요국들이 자국의 이해관계를 모두 노정하고 격론을 벌이는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국제경제 포럼으로서의 면모를 보이는 동시에, 필요한 수준의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세계경제 거버넌스의 기능을 수행함.

■ 한국은 신흥국 최초로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국가 이미지 제고와 국제적 신뢰를 높임.

- 환율분쟁으로 인한 파국의 불안까지 있었던 회의에서 갈등을 조절하고 합의를 도출한 한국의 조정능력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신뢰를 구축함.
- 회의의 준비, 운영 및 진행을 통하여 한국사회의 능력을 보여주었고, 비즈니스 서밋을 통하여 국제사회의 주요 기업들에게도 이러한 인식을 제고함.

■ 한국은 G20 정상회의 의장국 역할을 통하여 세계경제 운영집단의 일원으로서 뿐만 아니라, 리더로서의 그 역할을 통해 국제적 영향력을 급속히 확대함.

- G20 의장국으로 세계경제 운영방향에 관련된 다양한 고급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향후 국내경제 운영방향 설정에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게됨.
- 한국은 의장국의 역할을 통하여 국제사회의 네트워크를 단기간에 확대함으로써 향후 국제적 영향력 확대의 기반을 확보함.
- 한국경제에 가장 필요한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글로벌 금융안전망 도입, 핫머니 규제의 정당성 등을 국제규범화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확보함.

G20

■ 서울 정상회의는 신흥국과 선진국이 균형있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의견을 반영한 최초의 회의임.

- 서울 정상회의는 아젠다 설정에서 이미 신흥국들이 가장 고통받고 있는 금융위기 재발방지를 위한 금융안전망의 도입을 제시했고, 개발이슈 등을 통하여 신흥국의 관심사를 최초로 아젠다로 제시함.

- 서울 정상회의의 합의 내용에는 신흥국과 선진국의 의견이 균형있게 반영되어 그동안 선진국 중심의 합의내용과는 상당한 변화를 보임.

- 합의로 인한 수혜 면에서 IMF 쿼터 조정 등 오히려 신흥국이 더 많은 이득을 획득한 회의가 되었음.

- G7에서 G20으로의 힘의 이동이 국제기구 및 글로벌 거버넌스 조직으로 확산되고 현재화되는 과정을 IMF 쿼터 조정을 통해 보여주었으며 향후 이러한 변화의 심화를 예고함.

■ 새로운 글로벌 거버넌스로서 G20의 역할을 입증하였으며 구체적 행동계획의 발표와 실행보고서(Accountability Report)의 도입으로 실질적 영향력을 제고하는 등 제도적 안정성을 확대함.

- G20 정상회담이 국제경제 운영을 위해 지금까지 노정된 주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하고 합의를 이룸으로, 최상위 경제 포럼으로서의 역할과 필요성을 스스로 입증함.

- 그동안 실행력의 부족에 대한 비판이 있었으나 이번 회의에서 각국이 거시경제 공조를 위한 행동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이 실천에 대한 이행보고서를 도입함으로써 실질적 영향력을 제고함.

- G20 정상회의는 제도적 개선을 통하여 안정적 기반을 확대하고 있으며 향후 더 많은 제도적 변화가 예상된다.

4. G20

가. G20

- 거대 신흥국들의 등장과 유럽연합의 통합확대 등이 세계경제의 다자화를 심화하고, 이로 인해 이해관계의 대립구도가

다자화되고 있음.

- 경제위기의 극복과 국가별로 상이한 경제환경으로 인해 국제공조의 압력이 약화되어 합의를 도출하기 용이하지 않은 환경이 조성되고 있으므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이 필요함.
- 상기 문제들은 G20의 상설사무국 설치와 G20 정상회의의 과정에 대한 내부적 제도화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임.

■ G20 상설사무국 설치

- 서울 G20 정상회의는 역대 어느 회의보다 많은 합의를 도출한 성공적인 회의였고, 이는 한국정부가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전폭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임.
- '의장국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에 의해 G20의 성과가 결정된다면 G20이 안정적인 국제경제의 운영기구가 되기는 어려움.
- 따라서 상설사무국을 도입하여 G20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

■ G20 정상회의의 제도화

- 아직까지 G20 정상회의는 의제 선정, 논의구조, 아웃리치 프로그램 등을 의장단이 결정하고 있어서 제도화가 필요함.
- 의제 선정 과정이 특정 국가에 의해 강요되거나 저지되지 않아야 하므로, 제도화를 통해 객관적 필요성이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논의 구조 또한 실무그룹이나 전문가그룹 활용 등의 도입 여부에 대한 기준이 설정되어야 안정적인 논의 기반 확보가 가능함.

■ 한국은 의장국 역할이 이양되고 준비위가 해체되고 나면 외적으로나 내부적으로 G20 정상회의에 대한 영향력이 급격히 감소할 우려가 있음.

- 한국의 G20 진입은 성공했으나, 실질적인 성공은 오히려

향후 일반회원국으로서 지속적인 역할을 얼마나 잘 하는가에 달려 있음.

- 경제력 규모나 성장동력의 하향추세, 인구감소 등은 경제력에 의존한 영향력 확대는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임을 보여줌.
- 따라서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대처가 필요함.

■ 한국의 영향력이 제한적인 규모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국제공조를 통해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므로 아시아 관련자회의(Caucus) 혹은 동아시아 관련자회의를 설립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아시아는 G20 내에 6개 회원국을 확보하고 있으나 공동행동이나 그 필요성에 대한 제도적 협력이 부재하므로 지역 협력을 위한 관련자회의(Caucus)를 설립하여 필요에 따라 공동대응함으로써 영향력의 확대를 도모할 수 있음.
- 한·중·일은 이미 정상회의가 존재하며 다층적인 대화채널이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적어도 3국간 관련자회의(Caucus)를 시행함으로써 영향력을 확대하고 지역 간 협력도 증진할 수 있을 것임.

■ G20 내에서 지적인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한 전문적인 조직의 도입으로 항구적인 지원기능의 설치가 필요함.

- 한국이 지금까지 G20 정상회의에서 성과가 컸던 이유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조직적인 지원과 전문가들의 연구를 통해 지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기 때문임.
- 캐나다의 Munk School에서 운영하고 있는 G20 Information Center 와 같이 관련 연구와 국제적인 여론 조성 등을 통해 한국의 G20 정책개발과 지적 리더십의 유지를 지원할 기능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